

합의·번복 이어 우회지원...누리과정 예산 무한공방

국회 예산안 합의처리 초비상

새누리 “다른 예산 증액 통해...” 새정치 “5600억 국비로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을 뜻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여야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 협의의 시간이 9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여기에 지난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3차 협의에서 “국고 보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곧바로 여당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감정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다른 예산 증액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우회지원’하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우회 지원 카드는 새누리당에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 부담 원칙 준수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에게는 교육청에 사실상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실리’를 각각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야 간사의 ‘5600억원 국비 지원+지방채 지원’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보육 예산과 관련해 교문위 간사와 사회 부총리간의 합의를 새누리당이 파기했다”며 “정부·여당은 원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의 우회지원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왼쪽부터)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각 부처 예산의 보류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2조1000억원을 주장하다가 양보해서 (5600억원 국비 지원)을 얻어낸 것이다. 기존 합의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순증액분 5600억원 (황우여) 부총리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 교문위의 야당 측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박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과 ‘빅딜’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되니까 당황하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이는 정치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25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합의의 가닥이 추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이날 “월요일(24일)부터 여당 수석과 협상이 나설 것”이라고 밝히,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 앞서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누리 과정 예산에 있어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입지가 좁은 상황”이라며 “결국 원내대표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이날 “월요일(24일)부터 여당 수석과 협상이 나설 것”이라고 밝히,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 앞서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누리 과정 예산에 있어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입지가 좁은 상황”이라며 “결국 원내대표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발전 14개 협력과제 ‘착착’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 시·도가 합의한 14개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조만간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실무위원회와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 작업에 착수한다.

전남도는 23일 “지난달 1일 광주시와 함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이래 14개 과제별 실무협약이나 단계별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의원, 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도 인선 작업을 마쳤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 중이다. 전남 내에는 전남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산을 담은 광주·전남 문화관(전시관) 설치도 준비중이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한정 등 13개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춰 12월 중 ‘이전 공공기관장 협의체’를 가동해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밸리 조성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문화전당에 광주·전남 문화관 설치

혁신도시 이전기관장협의체 가동

한빛원전 안전 내달중 핫라인 설치

전문가 등 20명 자문위원 인선 마쳐

‘제2의 남도학술 건립’은 부지가 자리한 서울 은평구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가진 뒤 현재 건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연구 중이며, 내년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티웨이항공과 광주·전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기 공동 유치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은 현재 전남도가 지난 6일, 광주시가 지난 14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증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협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통합 조례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5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나주 종합 스포츠장 보수 및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나서는 한편 U대회 조직위에 46명의 직원을 파견해 협력하면서 전남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는 시·도와 한빛원전 간 실무협의를 거쳐 12월 중 핫라인 설치, 상시 모니터링 구축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 수립,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 및 창조사업, 광주·전남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방문 등 나머지 과제들도 논의중이다.

서은수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상생 협력과제 실천을 위해 현재 과제별 장단기 특성에 맞게 실무부서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2~3월 실무위원회와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담뱃세 인상 법안 예산부수법 포함될 듯

정의화 의장 내주 합의 거쳐 최종 지정 새정치 “국회 보이콧 불사” 강력 반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서민증세’ 논란 대상인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정의화 의장이 다음 주 초까지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가운데 대략 60여개가 예산부수법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 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제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24일 기획재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률을 추려 정리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의장 측은 예측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반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는 결국 일정 선에서 합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복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

100세 시대 동반자

포경생월금 국민연금

세대에 걸쳐 서로 도와
평생 든든 든든

국민연금으로 모두가 하나되고
서로가 힘이 됩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면 61~65세부터 매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해당하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